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31
----------	------

발의연월일 : 2024. 10. 28 .

발 의 자 : 이상희 · 박성훈 · 최은석
김태호 · 정동만 · 김장겸
이만희 · 박상웅 · 우재준
구자근 · 김위상 · 김선교
이철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어선·어구 감척이 필요한 대상 어업을 선정하고, 그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가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감척 사업은 수산자원 회복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경영악화로 인하여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인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음.

그런데 감척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자체가 매우 적어 감척 신청을 하고자 하여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폐업지원금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척 대상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규모별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척에 대한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업자”를 “어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척어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종류별·규모별로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고, 제1항에 따라 감척어업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u>어업자</u> 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 ----- ----- ----- <u>어업</u> <u>자(이하 이 조에서 “감척어업자”라 한다)</u> ----- ----- -----. ----- ----- ----- ----- -----.
1. 2. (생략) <u><신설></u>	1. 2. (현행과 같음) ② <u>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종류별·규모별로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고, 제1항에 따라 감척어업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u>
② ~ ⑤ (생략)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